

코로나 1년 버틴 소상공인 “방역전쟁 총알받이 더는 무리”

방역당국 내일 거리두기 조정 결정

코로나 규제 자영업자 희생 강요
확진자 감소 완만... 연장 가능성
“대출원리금·임대료도 멈춰야”

방역당국이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 정점이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 감소 추이가 완만한 상태여서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 현재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자영업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도깨비시장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울컥하고 있다. /중기부

총알받이)와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체육시설 유동적 운영)란 제목의 게시물이 참여인원 20만이 훌쩍 넘어선 가운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청원인 A씨는 ‘자영업자 총알받이’ 게시글에서 “코로나 규제방향을 보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 집합금지할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인은 “코로나로 집합금지되면 그 기간 대출원리금도, 임대료도, 공과금도, 각종 세금도 모두 정지되어야 한다”며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하나,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하나”라며 호소했다. 지난달 7일 올라와 지난 6일 기간이 끝난 이 게시글엔 20만6790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체육시설 유동적 운영’ 글은 보름 정도 지난 이날 현재 벌써 22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공감함을 표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체육시설은 ▲실내나 실외나 ▲사위장, 공용용품 사용제한 ▲시설 크기 대비 사용인원 제한 ▲운동 구역 구분 ▲회원 예약제 관리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융통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소상공인 1006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과 삶의 변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매출액은 3583만원에서 2655만원으로 25.9% 감소했다. 월 평균 영업이익은 727만원에서 468만원으로 35.6%로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먹고 살기가 더욱 팍팍해지다보니 ‘워라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응답 소상공인의 71.3%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만 성피로·피곤함, 우울감이 늘었고, 일의 질도 나빠졌다.

또 절반 가량은 월 평균 수입이 ‘불만족’하고, 노동 시간도 ‘너무 많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겨우 5.22점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코로나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에 끼친 영향까지 세심히 살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고통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국민의당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가맹점 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양대포털 ESG 경영 강화 네이버 카본네거티브 추진 카카오 지배구조현장 개정

네이버 아동·청소년 보호 센터 운영
카카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신설

네이버와 카카오도 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ESG 경영이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한 재무적인 요소 외에도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건전한 지배구조에 가치를 두는 경영 행위를 일컫는다.

네이버는 지난해 ESG 위원회를 신설한데 이어 최근 최고재무책임자(CFO) 산하에 ESG 전담조직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ESG 위원회는 ESG 기반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통해 사업 방향과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환경에 대한 이슈를 관리한다.

네이버는 ESG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목표도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친환경 이커머스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및 경쟁력 강화, 파트너 성장지원 확대, 주주 가치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후변화, 정보보호·보안,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오는 2040년까지 배출되는 탄소량보다 더 많은 탄소량을 감축하는 ‘카본 네거티브’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친환경 관련 사업과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2013년 6월에 오픈한 데이터센터 ‘각’에도 친환경적 요소가 대거 들어가 있다. 서버의 열을 내리기 위해 스노우메iting,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외부 공기를 통한 자연 냉각 시스템 등이 도입됐다.

음란·불법 게시물 차단과 아동·청소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전경. /네이버

년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전담팀과 긴급신고센터 운영, 저작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특히 네이버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프라이버시 센터’를 오픈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각 서비스 운영 정책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하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김범수 의장, 최세정 사외이사, 박새롬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기업지배구조현장’도 제정해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현장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등 5개 영역에 대한 운영 방향과 함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은 책임 경영을 수행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

ESG 위원회 신설 전에도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을 해왔다. 지난 4일에는 구성원과 사업 파트너의 인권 보호 및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 등을 담은 ‘인권경영선언문’을 대외에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와 관련된 금지 행위 조항을 운영정책에 추가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센터도 친환경으로 지을 예정이며, ESG 경영 현황과 성과는 향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ESG 경영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개인도 투자를 할때 ESG를 준수하는 기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시장 초기단계... 퇴직연금 등 정책확대 기대

>> 1만 '200조 OCIO...'서 계속

그는 또 “OCIO 시장은 사실 대형 기금 외에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때문에 해당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노후를 쌓는 등의 목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OCIO, 성장 잠재력에도 문제점 여전
OCIO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앞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국내 OCIO 시장 확대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개선할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OCIO 제도가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OCIO 본래 기능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 시장의 경쟁 과열로 원가 이하의 왜곡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OCIO 운용사의 위탁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운용규모에 비례하는 운용보수와 운용성과에 비례하는 성과보수로 나

니다. 우리나라는 다수 OCIO 활용 기관이 복수 주간운용사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OCIO 운용사 간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성과보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원은 ‘국내 OCIO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OCIO 운용사의 역할은 상품 선정 같은 자금 집행에 국한돼 있고, 엄격한 전담운용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고비용 구조”라며 “고비용 구조임에도 과도한 시장 진입 경쟁과 원가 이하의 비합리적인 수수료가 일반화되고 있어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OCIO 제도 개선을 위해선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정의 ▲운용 목표와 허용위험한도 설정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정의 ▲성과 측정 및 관리 체계 ▲수수료 체계 합리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재민 기자 yji1208@

금융위, 금감원 전자공시 검색기능 강화

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분기보고서 공시항목 40% ↓

앞으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검색기능이 강화된다.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는 기존 공시항목의 40%를 줄여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된다.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도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 또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